금속노조통신 84호

발행일 2021년 1월 7일(목) ❙ **발행인** 김호규 ❙ **SNS** bit.ly/금속노조_페이스북 ❙ **편집**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 (02)2670-9507

현대차, 하청노동자 죽이고 개인 과실로 몰아

원청 임원 방문한다며 갑자기 작업지시 … "원청이 시키니 그냥 하라" 작업 강요

현대자동차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대차가 노동자를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에 내몰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에 ▲위험의 외주화 중단 ▲2인 1조 작업 시행과 안전인력 확보 ▲안전보건시스템 전면 개선과 안전대책 수립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는 현대차 울산 1, 2, 3공장의 설비 보전 업무를 맡은 외주 2차 하청업체인 마스타씨스템 소속이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본래 업무 외에 설비에 끼거나 바닥에 떨어진 철판 찌꺼기인 스크랩을 청소하는 일도 해왔다.

피해 노동자는 1월 3일 스크랩을 압축하는 기계 베일러머신이 계속 작동하는 상황에서 스크랩 청소 작업을 했다. 베일러 머신은 신체가 닿으면 작동을 멈추는 안전센서를 달아야 하는 위험 설비이지만, 확인 결과 안전장치가 없었다.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과 울타리가 없었고, 필수 규정인 2인 1조 작업 규정도 무시됐다. 결국, 혼자 작업하던 이 노동자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해당 작업은 원청인 현대차가 허가해야 작업이 가능한 위험 작업이다. 현대차는 1월 2일과 3일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서'와 '공사전 위험성평가표'를 발행했다. 허가서 등에 작업 인원을 여섯 명으로 지정했지만, 프레스 1부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는 모두 네 명뿐이었다.

현대차는 게다가 임원이 울산공장을 방문한다며 예정에 없던 작업을 지시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을 확보할 시간 여유조차 없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무섭게 돌아가는 설비를 청소하는 하청 노동자의 참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차는 '작업자가 지침을 어기고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작업하다 당한 사고'라며 개인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정의선 체제 들어서도 노조파괴 여전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 “원청 기획 없이 대리점 폐업 불가능”

부산에서 현대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들이 대리점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점주가 금속노조 비조합원만 고용 승계를 약속해 노조파괴용 기획폐업 의혹이 일고 있다.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대차 수비대리점이 폐업했다. 점주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대리점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된다며 운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다른 곳에 대리점을 다시 여는데, 해당 점주는 이전을 포기했다.

현대차는 대리점이 폐업하면 지역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 대리점을 연다. 특히 폐업한 대리점의 판매노동자들을 새 대리점이 그대로 고용했다. 개업이 어렵거나 새 대리점이 기존 판매노동자를 모두 받지 못하면 인근 대리점으로 분산해 고용을 승계했다.

현재 현대차는 새로운 대리점주를 내세워 개업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폐업 점주는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카마스터들에게 인근 대리점에서 계속 일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자동차판매연대 부산양산지회는 1월 5일 오후 현대자동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현대차 원청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확실한 고용승계 이행을 촉구했다.

문철상 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자동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2015년 노동조합을 만들자 현대·기아차 사측은 대리점 폐업 등으로 1백 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내쫓았다”라고 규탄했다.

문철상 지부장은 “2019년 대법원이 카마스터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이후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대리점별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폐업을 통한 노조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철상 지부장은 “현대차 자본은 노조파괴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 기아차 광안대리점도 위장폐업했다”라며 “현대차는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생존권을 함부로 빼앗는 구시대 노조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진 노조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장은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기본급과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지만, 일자리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다”라면서 “대리점을 폐업해도 인근 대리점 등으로 당연히 고용이 승계됐다”라고 설명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현대차 자본이 대리점 제도를 20년 넘게 시행하며 지켜온 고용 유지 관례를 유독 금속노조 조합원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현대차는 대리점 문을 잘 닫지 않는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세워지자 급작스러운 폐업과 고용 승계 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지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는 현대차의 기획과 지시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현대차 원청이 수비대리점 문제를 책임지고 고용 승계 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판매연대 부양지회는 이날 현대차 사측에 ▲수비대리점 판매노동자 고용 승계 ▲노조탄압 위장폐업 중단·금속노조 인정 ▲카마스터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회는 결의대회 직후 현대차 부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김진숙 복직은 인간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구성 … 김진숙 조합원, 서울로 뚜벅뚜벅

노동·시민·종교인 등 각계 대표자 233명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했다.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월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숙의 복직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한 노동 존중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진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다"라며 "정치권과 한진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산업은행을 압박하기 위해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복직이 해를 넘기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실에 개탄하고, 국가폭력과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명예회복과 복직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 힘 대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 한진중공업 채권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김진숙 조합원은 재발한 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다.

양대 노총, "국민 죽지 않도록 법 만들라"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긴급 기자회견 … "솜방망이 처벌 정부안 폐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노총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긴급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중대재해 사망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두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면서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답은 포스코에, 현대자동차에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제대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사구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상황이 암담하다. 거대 양당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가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는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